

【 2015.10.02(금) 강원일보 】

첫 공개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올림픽플라자의 위용... 설렘 가득한 축제의 장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상징하는 올림픽플라자의 기본설계 조감도를 1일 본보기 단독 입수했다. 올림픽플라자는 4만석 규모로 건설되는 개·폐회식장(940억원)을 비롯해 메달플라자, 성화대 등이 들어선다. 1,226억원을 투입해 2017년 9월 완공된다. 개·폐회식장은 대회 이후 야외 관람석 1만2,000석 규모로 축소된다. 경제성을 고려해 지형조건을 활용한 부지 조성 및 가설스탠드는 100% 임대해 사용하도록 설계했다. 건축미를 살리기 위해 막구조를 이용한 외벽 조명 및 스크린 연출이 가능하다. 또 올림픽리거시 차원에서 스탠드를 이용한 야외공연장, 본부석 일부를 기념관으로 조성한다. 현재 도는 조직위가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법의 절차를 밟고 있다. 조감도는 ① 남서측 상공에서 바라본 전경 ② 개·폐회식장 주 출입구 전경 ③ 남동측 상공에서 바라본 전경. 이성현기자

평창올림픽에 행정력 올인

道 “성공 개최 위해 집중”
올림픽로드 건설 등 골자

도가 1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림픽 붐 조성, 문화·관광·경제올림픽, 친환경·안전올림픽, 북방경제 선도를 위한 올림픽로드 건설 계획 등이 골자다. 우선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 2,819명을 모집해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들은 주로 외국인 통역과 관광안내 등 경기장 외에서 활동하게 된다.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 2만명은 경기장 내에서 각각 임원과 선수단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또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도민 서포터즈 1만5,000명을 모집하는 한편 해외 언론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올림픽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022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중국 베이징, 허베이성과 동계올림픽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해 양국 합동훈련 등 우호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창(2018), 도쿄(2020), 베이징(2022) 올림픽을 연계한 올림픽로드를 건설하는 한편 한·중·일 관광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올림픽관광상품 공동 개발에 나선다. 김보현 도기획관은 “안전올림픽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개최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해 전 세계인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

인사

◇강원도

▼담양급 전보·승진·복귀·파견 △기획조정실기획관실 김형진(문화관광체육국체육과) △경제진흥국사회적경제과 김현정(니엠제트박물관) △문화관광체육국체육과복귀 배영주(총무행정관실) △총무행정관실통일부과관 한철수(△건설교통국지역도시과 용원영(재난안전실방재과) △총무행정관실2018조직위과건 이만자(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기획조정실균형발전과·승진) △교육법무과 박수연(경제진흥국경제정책과) △인재개발원교육지원과 김석균(전력산업과) △통해안련경제자유구역청 김상범(녹색국산림소득과) △정호철(총무행정관실) △디앤제트박물관 유효숙(기획조정실세정과) △총무행정관실2018조직

위과건 윤종대(총무행정관실) △환동해본부해운항만과 임성진(내수면자원센터) △재난안전실방재과 박형철(건설교통국건축과) △

※강원도·강릉시·속초시 인사 명단은 강원일보 홈페이지(www.kwnews.co.kr) 참조.



건설단체연합회 정기회의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오인철)는 1일 평창의 한 식당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불공정 행위 해소 및 2015 강원예코호텔 성공 개최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2015.10.02(금) 강원도민일보 】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정기회의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1일 오후 평창 알펜시아 회의실에서 도연합회 제3차 정기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인사

강원도 ◇담당급 전보
 △김형진 기획관실△김현정 사회적경제과△배영주 체육과△한철수 총무행정관실△윤원영 지역도시과△이만자 2018조직위△이병영 군형발전과△박수연 교육법무과△김석군 인재개발원△김상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정호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유호숙 디엠제트박물관△윤종대 2018조직위△임성진 환동해본부△박형철 방재과

8월 건설수주액 59.3% 감소

지난 8월 강원도 건설 수주액이 643억원으로 전년보다 절반이상(59.3%) 감소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8월 강원지역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도내 일반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액은 643억원으로 지난해 1578억원보다 절반넘게 감소했다.

발주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이 535억원으로 전년 296억원보다 239억원 늘었다.

하지만 민간부문은 107억원으로 전년 1054억원보다 무려 947억원이 줄었다.

공정별로는 건축이 468억원으로 전년 1406억원보다 938억원 줄었고 토목은 174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도내 광공업 생산 지수는 106.3%로 전년보다 3.8%p 상승한 반면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27.8%로 전년보다 4.1%p 감소했다. 안은복

【 2015.10.02(금) 건설경제 】

강건연, 3차 정기회의... 적정공사비 확보 등 현안 보고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1일 강원도 평창의 한 식당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적정공사비 확보 및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 등 현안 보고를 받고, 2015 강원건축문화제 참여 등 올해 세부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건설 전문가 상담코너

Q 당사는 공동도급공사 계약을 하면서, 각 참여사 간 별도 협정에 의하여 당사가 모든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각 참여사에 손실을 분담시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여사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제할 수 있는 세법이나 회계 규정이 있는지?

A 발주처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각 참여사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공사의 전부를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공사를 실행하지 않은 참여사들이 발주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공사부분에 대해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는 것은 세법 규정과 달리 실무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손실 발생 부분은 실제로 회사가 수행한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참여사에 형식적으로 손실을 분배하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 수행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제하는 세법이나 회계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각 참여사들과 협조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각 참여사들에 강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종현 태성회계법인
 건설 회계상담 자문위원




제공 : 대한건설협회·상담신청 : 02-3485-8305, www.cak.or.kr

국토교통 규제개혁 주요내용


1 맞춤형 도시규제 완화

건폐율 규제개선으로 기존공장 증축허용

농지·관리지역


 편입부지 기존부지
 편입 기존
 건폐율 20% → **별도** 40% → 20% → **합산**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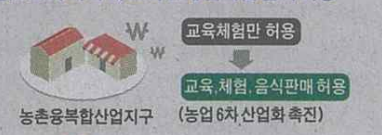
제방·제과,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 완화

주거지역


 별도 합산
 바닥면적 각각 500㎡ 미만으로 제한 → 1000㎡ 미만으로 제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거침)

2 입지규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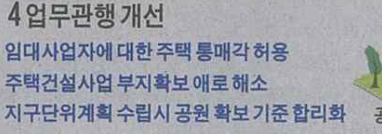
생산관리지역내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 허용



 교육체험만 허용
 교육, 체험, 음식판매 허용 (농업 6차, 산업화 촉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생산농지지역내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건폐율 20% → **60%**

4 업무관행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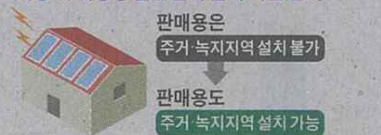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통매각 허용
 주택건설사업 부지 확보에 호소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원 확보 기준 합리화



 거주 녹지
 거주인구당 3㎡ 수준의 공원 확보
 확보 공원면적에 녹지도 포함

3 경직적 법적용 완화

지붕 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준 완화



 판매용은 주거 녹지지역 설치 불가
 판매용도 주거 녹지지역 설치 가능
 일조권 관련 건축 규제 합리화
현행 도시계획시설 위치에 따라 상이한 일조기준 적용
개선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에 관계없이 도로와 시설의 폭이 20m 이상이면 정북방향 일조기준 배제

주택사업 시행사인 LMS디벨럽먼트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일대 4만3000여㎡ 부지에 85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혔다. 동해고속도로 미사용 부지 5개 필지(1만여㎡)가 사업구역을 사선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여의도 면적(8.48km²)의 1.2배에 달하는 전체 미사용 부지의 매각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2년이 걸린다. LMS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사업이 물거품이 되고 조사 용역, 토지 계약 등에 투자한 30억원도 날릴 처지다.

국공유지 '부분' 매각, 매입형 뉴스테이 '주택 통분양' 등 허용

현장 '넓은규제' 풀어 7800억 투자 유도

국토부, 규제개혁 '10개 개선과제' 확정

국토교통부가 이처럼 각종 규제와 업무관행의 족쇄에 묶여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끝장 해결' 해주기로 했다.

유일호 장관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산업계와 지자체가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78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예상했다. ▶관련기사 3면

속초 아파트 건설부지의 경우

국공유지 매각 절차를 개선해 토지 이용수요가 있는 부지만 따로 때 우선 매각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동해고속도로 실효부지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조사 등을 거쳐 지자체 용도 폐지, 자산관리 공사 이관 등까지 2년 이상 걸리던 절차가 3개월로 단축된다. 이 사업 추진으로 직접 건설투자비만 1700억원, 고용창출 2400여명 등 총 37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지자체 조례에 발목이 잡혔던 한화건설의 첫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도 숨통이 트였다. 한화건설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2400가구 규모로 매입형 뉴스테이(수원 권선 꿈에그린)를 짓는다. 이 사업은 한화건설 등이 공동 출자한 리츠가 준공 전 주택을 통매입(분양)하는 방식인데, 수원시 조례가 이를 막고 있었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주택공급 규칙을 바꿔 주택 전체에 대한 우선 공급을 허용했지만 수원시는 과거 조례를 적용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시를 비롯해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주택 통분양을 승인해줬다"며 "수원 권선, 서울 대림 등의 매입형 뉴스테이 사업 추진으로 43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장관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개혁은 의미가 없다"며 "단순 제도개선에 그치지 말고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건설, 정책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 애로해소지원팀(TF)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시장 다시 먹구름?... 수주·체감경기 동반하락

상승곡선을 그리던 건설수주와 건설기업 체감경기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수주액(경상)이 8조3640억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같은 달 8조6880억원보다 3.7% 감소했다.

이로써 올해 3월부터 작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던 건설수주는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관련기사 2면

토목부문과 공공부문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건축부문과 민간부문이 감소세로 돌아선 탓이 컸다.

같은 날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9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도 8월보다 4.4p 하락한 87.2를 기록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 7월까지 25.5p나 상승했던 CBSI는 8월에 전달보다 9.7p 감소한 데 이어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혹서기가 끝난 9월에는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회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9월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건설연은 설명했다.

특히 9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도 전월 대비 12.6p 하락한 91.3을 기록했다. 주택(-5.4p)과 토목(-2.7p) 공종이 전체 신규공사 지수를 끌어내렸다. 김성적기자 jskim@